

정치문화 개혁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정치문화 개혁' 이것은 17대 국회를 비롯해서 유권자들의 환경같은 의미이다. 2곳은 16대 국회가 치러지던 후반기에 임했던 부대정치라 비추어볼 때 동기간 부정부패 또는 국정 동요는 기정사실의 발판국회선발 그리고 명분악한 대통령 탄핵소추기정등의 국정선방으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깊어졌는데서 비롯된다. 유권자들이 지난총선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87명의 국회의원과 13%에 이르는 39명의 여성의원들을 선출하는 데에 국민들의 해방같은 정치문화를 바꾸어놓는 데에 의의가 있다.

17대 국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서 국회에서 의원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이윽고 해야 할 일이다. 국회도 개혁 운영상태이다. 언론에서는 개혁없는 진행국회라고 비난하고 있다. 출범 당시 각정당 지도자들이 다짐했던 '상생정치'는 간데 없다. 실업률은 느리고 물가는 치솟고 있어서 '국민총지수'가 최고에 달해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는 오히려 뒷전에 두고 정치권은 주도권 쟁탈을 둘러싸고 싸움만 하고 있다.

2012년 '비주' 여론으로 40%가 개혁을 바라고 384세대가 약진했으며 16대 국회가 국정선방 가장 부끄러운 기록들을 남겼을 상기에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 놓은 유례가 없는 국회로 시작됐다. '상생'이 아닌 '상생정치'가 개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리기 여야간 유선언에 대하여 국회의총의장 앞쪽에 매치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생정치'를 위한 공동노력을 해보겠다고 '일꾼 모임'을 만들것으로 약속한 국회가 현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의회주도의 대폭적인 움직임으로 불려지고 국회는 대리로 '정쟁'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문화'에 이따금 변화가 없는것을 전방위적으로 새로 실질적인 의회의 권력관계가 변질되고 있는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36개개혁이 전면적으로 수행될수 없는것은 국회의 개혁의지를 갖고 정치세력이 의회 다수결방의 주요 목적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에서 '리선'이라는 권위가 지배하는 권력구조에서 원천들이 주권을 잃고 있다고 하겠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고 하기 힘들고, 해쳐줄 수 있는 리선이다. 최근 어느 신문이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을 가장 바쁜 10대 요인들의 3위를 꼽은 '상생'을 낳는 '정치'가 고질병을 17대국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다행인것은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데라단'의 10월 22일 막을 내린 36개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보면 리기에 비해 국민의 수준이 높아진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국정으로 정치개혁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당의 이면에서 여의회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상생과 리선 그리고 연방이 크게 기여 했다는 것이다. 모데라단이 선정한 우수의원 57명중 여의회의원이 30.8%인 12명이다. 리기에 반해서 여의회의원 의회에 보내야 한다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리고 제1의회의원들의 공동 의원활동 평가는 '일꾼모임'에 속한 최선의의원들이 반국회다수의 권위로 대변해야 하는 정치문화개혁을 위한 준당국인 행정부에 무제한 대해질수 있다. 정치개혁개혁이 주권에 중화되거나 회화되거나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않는 '한은' 유권자 개혁을 위한 의원활동을 해나간다.

정부가 해방적으로 정쟁을 할수밖에 없는데서 해방을 해주는 민주시민과 민생문제 비쳐 불투명함으로 유권자는 불만을 갖고있는 있다. '국정감사 NGO 모데라단'

지선 미국대사관에서 후원한 최대홍장이 만주강의 카피후보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우리
우리의 마음에 두려왔던 최대홍장의 희망의 노래를 어느것을 선택할까 하는 물음을 던졌던 바 있다.
우리국민의 분열하게 북한에서 지고 가는 최대홍장의 노래를 희망하고 우리 인민의 분열을 일으키는
최대홍장의 분열을 우리 노래 문화에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이래 13일 간의 개입 휴업상태의 대법원 회로부는
국민의 비위를 현저하게 높인다.

정치문화 개혁

11.3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정치문화 개혁’ 이것은 17대 국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것은 16대 국회가 차떼기와 측근비리로 얼룩진 부패정치와 비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또는 석방동의안 가결 등의 방탄 국회 남발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등의 국정난맥으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극에 달했던 데서 비롯된다.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석 3분의 2에 해당하는 187명의 조선의원과 13%에 이르는 39명의 여성의원을 선출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낸 것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17대 국회가 출범한지 6개월인 이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하겠지만 ‘목하 국회는 개점휴업상태이다. 언론은 출구 없는 파행국회라고 힐난하고 있다.’ 출범 당시 각 정당 지도자들이 다짐했던 ‘상생정치’는 간테없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있어서 ‘국민고통지수’가 최고에 달하고 있는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에 두고 정치권은 주도권 쟁탈을 둘러싸고 싸움만 하고 있다.

2000년 ‘바뀌’ 열풍으로 40%의 현역을 낙선시키고 386세대가 약진했던 16대 국회가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들을 남긴 것을 상기하며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상생’이 아닌 ‘상쟁정치’가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여야 간 몸싸움에 대비해 국회본회의장 앞줄에 배치된 여야 조선의원들이 ‘상생정치’를 위한 공동노력을 해보겠다고 ‘앞줄 모임’을 만든 것은 오늘의 국회가 정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의회구성원의 대폭적인 물갈이에도 불구하고 극한 대치로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정치문화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전문가들은 바로 실질적인 의회의 권력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데서 연유한다고 한다. 정치개혁이 전면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은 구체제의 기득권을 갖는 정치세력이 의회 또는 정당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록과 ‘다선’이라는 권위가 지배하는 권력구조에서 신진들이 구태를 일소한다고 하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과제이다. 최근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10대 요인 중 3위로 꼽힌 ‘생산성 낮은 정치’의 고질병을 17대 국회는 바로 잡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10월 22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한데 따르면 과거에 비해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정화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평가의 이면에는 여성의원들과 조선의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 그리고 열성이 크게 기여했다는 진단이 ‘따른다.’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의원 57명 중 여성의원이 30.8%인 12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다수의 여성들을 의회에 보내야 한다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그리고 ‘앞줄모임’에 속한 조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내려진 좋은 평가는 관록과 다선의 권위와 대결해야만 가능한 정치문화개혁에 미치는 초당적인 영향력에 무게를 더해준다. 정치개혁세력이 구태에 동화되거나 퇴출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가 인정하는 의정활동을 펴는 데서 얻어진다.

정치가 태생적으로 정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민족문제와 민생문제마저 불모로 삼는다면 유권자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과 여성의원들을 밀착

가감하는 것은

일어

다른 구성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모니터 하고 있는 '평등국회 지킴이'는 의원들의 개인의정활동만이 아닌 정치문화 개혁에 대한 이들의 노력도 함께 감사·평가하고 이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내가 뽑은 대의기관이 제대로 된 대의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은 의원과 유권자의 공동책임이다.

국민의 민생고 해결과 산적한 법안과 의안 처리를 외면한 채 지난 28일부터 13일째 파행국회로 의사일정이 공전되고 있다. 국민민복의 정치, 생활정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 상생정치를 외치며 17대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권을 향한 주도권 쟁탈전으로 정쟁이 끊이지 않는 생산성 낮은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정치문화개혁의 우선과제라는 것을 17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아니, 대권이라는 말부터 잊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물신적으로 묶인 노예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성실한 대변인이자 심부름꾼이야말로 자신들이 지녀야 할 진정한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회
소모적인

국민과국가를 위한 성실한 대변인이자 심부름꾼이 아니라 권력물신에게 권력의 책무를 떠까지 짚는다.

차기 대권임을 계몽하고 있는 소모적인 정쟁이 끊이지 않는 '생산성 낮은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권력물신에게 권력의 우선과제라는 것을 17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민복의 정치, 생활정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 상생정치를 외치며 17대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과국가를 위한 성실한 대변인이자 심부름꾼이 아니라 권력물신에게 권력의 책무를 떠까지 짚는다.

Final

10.6

정치문화 개혁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정치문화 개혁’-이것은 17대 국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그것은 16대 국회가 차떼기와 측근비리로 얼룩진 부패정치와 비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석방동의안 가결 등의 방탄 국회 남발,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등의 국정난맥으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극에 달했던 데서 비롯된다.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석 3분의 2인 187명의 초선의원과 13%에 이르는 39명의 여성위원을 선출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낸 것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17대 국회가 출범한지 6개월인 이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르다고 하겠지만 지난 28일 이래 13일간의 개점휴업상태의 파행국회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출범 당시 각 정당 지도자들이 다짐했던 ‘상생정치’는 간데없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있어서 ‘국민고통지수’가 최고에 달하고 있는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에 두고 정치권은 주도권 쟁탈을 둘러싸고 싸움만 하느라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2000년 ‘바뀌’ 열풍으로 40%의 현역을 낙선시키고 386세대가 약진했던 16대 국회가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들을 남긴 것을 상기하며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상생’이 아닌 ‘상쟁정치’가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여야 간 몸싸움에 대비해 국회본회의장 앞줄에 배치된 여야 초선의원들이 ‘상생정치’를 위한 공동노력을 해보겠다고 ‘앞줄 모임’을 만든 것은 오늘의 국회가 정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의회구성원의 대폭적인 물갈이에도 불구하고 극한 대치로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정치문화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바로 실질적인 의회의 권력관계가 변화하지 않는 데 연유한다고 한다. 정치개혁이 전면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은 구체제의 기득권을 갖는 정치세력이 의회 또는 정당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록과 ‘다선’이라는 권위가 지배하는 권력구조에서 신진들이 구태를 일소한다고 하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과제이다. 최근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10대 요인 중 3위로 꼽힌 ‘생산성 낮은 정치’의 고질병을 17대 국회는 바로 잡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10월 22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한데 따르면 과거에 비해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정화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평가의 이면에는 여성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 그리고 열성이 크게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의원 57명 중 여성위원이 30.8%인 12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다수의 여성들을 의회에 보내야 한다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그리고 ‘앞줄모임’에 가담할 수 있는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내려진 좋은 평가는 관록과 다선의 권위와 대결해야만 가능한 정치문화개혁에 미치는 초당적인 영향력에 무게를 실어준다. 정치개혁세력이 구태에 동화되거나 퇴출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운동체의 뒷받침에서 얻어진다.

정치가 태생적으로 정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민족문제와 민생문제마저 불모로 삼는다면 유권자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과 여성의원들을 밀착

가치2인

38212433

모니터 하고 있는 '평등국회 지킴이'는 의원들의 개인의정활동만이 아닌 정치문화 개혁에 대한 이들의 노력도 함께 감시·평가하고 이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내가 뽑은 대의기관이 제대로 된 대의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은 의원과 유권자의 공동책임이다.

차기 대권만을 겨냥하고 있는 소모적인 정쟁이 끊이지 않는 '생산성 낮은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정치문화개혁의 우선과제라는 것을 17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국리민복의 정치, 생활성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 상생정치를 외치며 17대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실한 대변인이자 심부름꾼이라면 정치문화개혁의 책무를 비켜갈 수 없다.